
신문 언어의 민주주의

이경우·서울신문 교열팀 차장

1. 영부인? 여사?

“권양숙 씨가 뭐니까?” 남북 정상 회담 직후였다. 이 신문은 대통령 부인을 지칭하며 ‘권양숙 여사’라고 하지 않았다. 독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신문을 끊겠다.” 이런 항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창간 이래 계속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써 오던 터였다.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씨,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회호 씨.’ 신문사로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지만 일부 독자들에게겐 어색하게 전해진 것이다. 정상 회담이라는 무대여서 그런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인 모양이었다.

이 신문은 칼럼을 통해 친절한 답을 내놓았다. “용어에서 나오는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지우려는 뜻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호칭을 가급적 피하자는 의미도 있다.”

신문이 누구를 직접 호칭하는 일은 별로 없다.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어가 대부분이다. 이전 신문들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지칭은 ‘영부인 ○○○ 여사’였다. 아니면 지금도 쓰이는 ‘대통령 부인 ○○○ 여사’가 일상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독자들은 ‘영부인(令夫人)’이 ‘대통령(大統領)’의 ‘령’

에서 온 것처럼 받아들였다. 더욱이 '영부인'은 '각하'의 부인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 '영부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남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는 퇴색해 갔다. 지금은 '권위적'이어서 대부분 신문에서 '영부인'이 사라졌다.

'여사'는 존칭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을 높여 이르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여성을 높여 이를 때 사용한다. 일상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 부러 쓰기도 한다. 신문에서는 주로 남편의 사회적 위치를 봐 가며 붙인다. 따져 볼 일이다. 일상에서 특정인을 높인다고 신문에서도 높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신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부르고 가리켜야 공정하다. 신문에서 '여사'는 특정한 층에만 붙이니 권위를 주고, 여성임을 굳이 드러내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다. 구분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씨'가 쓰이는 공간은 다양하다. 그만큼 뜻도 여러 곳에서 달리 쓰인다. '씨'는 상대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격식을 갖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친근감을 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치중립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방송도 그렇지만 신문에서도 누구를 지칭하든 '씨'는 가치중립적이며 격식을 갖춘 지칭어로 쓰인다. 방송에서 사회자는 아버지뻘 되는 출연자를 지칭할 때 흔히 '씨'를 붙인다. 불특정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났다. 얼마 뒤 인터넷 매체가 지칭과 관련해 소동이 빚어진 소식을 전했다. 한 신문이 사설에서 '이 명박 후보', '박근혜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쪽에서 강하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표'라 하지 않고 '박 씨'라고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대체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경제인 등 특정인들에게 '씨' 자 붙이는 것을 주저한다. 독자들은 그들에게 '씨'라는 호칭이나 지칭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틀에 갇힌다. 신문은 그 특정인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가끔 '○○○ 씨'라고 한다. 한마디로 전관을 예우한다. 법조

계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 대통령, 전 국회의원, 전 대법관, 전 장관, 전 검찰총장, 전 대표, 전 서울시장, 전 경기도지사, 전 회장, 전 사장…….' 물론 전직으로 지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직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기사에 등장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고 한 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식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장관을 지낸 ○○○ 씨가……', '○○대 국회의원을 지낸 ○○○ 씨는……'이라는 표현도 신선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 지금보다 더 자주 보인다면 '○○대 대통령 ○○○ 씨'도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다. 현직이더라도 이따금 직책을 먼저 쓰고 이름 뒤에 '씨'를 붙이면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문의 권력은 독자로부터 나온다.

2. 그들만을 위한 서술어

독대를 하고 만찬을 한다. 그들의 행위만 서술하는 말이 있다. 옛날 '수라(水刺)'는 임금이 먹는 밥을 가리켰다. 신문에서 '만찬(晩餐)'은 특정한 계층이 먹는 저녁 식사 의미로만 주로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만찬'이 저녁 식사가 아니라 푸짐하게 잘 차려진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김 부장 일행은 이날 저녁 김만복 국정원장, 남북 정상 회담 당시 특별 수행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주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하고……”,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저녁 한 총리가 주재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첫날 일정을 마쳤다.” ‘만찬’은 이처럼 신문에서 특별한 사람들의 저녁 식사 용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처럼 ‘저녁 식사’라고 표현한다. “차범근 수원 감독은 독일 분데스리가서 활약할 시절 시간이 날 때마다 동료

들을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는 대부분 더 고급스럽게 인식된다. ‘만찬’이 ‘저녁 식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특별한 자리에 쓰이듯이 여러 한자어들이 그렇다. 한자어들은 공고하게 지원을 받으며 더 특별해진다. ‘만찬’은 신문에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자리에 선택된다. ‘저녁 식사’가 때때로 특별하게 쓰인다면 무겁지 않고 정겹지 않을까. ‘만찬’이 주는 메시지와 ‘저녁 식사’가 주는 메시지는 다르다.

“탈당에 앞서 이미 4월 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치적 결별을 고했던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독대’는 이처럼 특별한 권력자와 만나는 상황에 등장한다. 권력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함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신문은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권위를 선사한다. ‘독대’는 전근대 시대에 쓰던 용어다. ‘독대(獨對)[-때] 『명』 『역』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표준국어대사전) ‘임금’ 대신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옹립(擁立)’은 또 뭔가. 임금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사만사 모튼)를 옹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문은 다른 자리에서도 ‘옹립’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당사자인 후보자는 물론 국가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집단들의 ‘근시안적 소탐’에 의한 ‘미래적 대실’을 염려하는…….”

이 외에 그들의 권위를 한껏 세워 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나온다. 그들끼리 쓰는 표현을 그대로 신문으로 옮겨 온 것이다. 신문 언어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았다. “검찰이 당시 외환은행 실무자들을 속속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즘처럼 ‘소환’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 때도 없는 듯하다.

소환은 범죄인에게 주로 쓰는 법률 용어다. 그렇다 보니 권위주의적 인상을 풍긴다. 여기서 실무자는 범죄 혐의로 부른다기보다 참고인 조사 성격이었다. 검찰은 언제나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인식될까 우려된다.

가끔 특정 지위에 있는 이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지기도 한다.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과 등 30여명의 의료 봉사팀이 인술을 베푸는 동안 미용팀 4명은 섬 주민들에게 무료로 머리 손질까지 해 줬다.” 의료 봉사팀의 행위는 ‘인술’로 ‘베풀어’졌고, 미용팀은 단지 ‘손질’을 했다.

“신 총재는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연습할 당시 비공개로 금일봉을 전달했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부장 일행을 50분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달부터 자신의 집무실을 개방해 임직원들과” 이렇게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금일봉과 친서를 전달한다. 신문은 그들의 행위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3. 계층 만들기, 비하하기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특징인을 지칭하지 않고 실체가 모호하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럼에도 신문은 즐겨 쓴다. 대상을 만들고 질타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 우리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의사? 변호사? 예술가?……. 범위를 따지다 보면 한없이 넓어진다. 한데 뭔가 ‘지도’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흔히 ‘사회 지도층’이라는 말이 신문에 등장하는 것은 정치인 혹은 경제인, 고위 관료, 전문가 등이 잘못을 저지른 때다. 혹은 사회 전반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에서도 더 보인다. 따라서 이 말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사회 지도층’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신문 등 언론 매체다. 그렇다고 신문 언어로서 적합해 보이지도 않는다. 우선 출처 자체가 의심이 많이 간다. 신문이 ‘알아서’ 먼저 사회 지도층이라 부른 흔적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 않다. 이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신문이 비판 없이 가져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성 매수 남 가운데는 대학교수, 의사, 약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거한 대학교수, 의사, 약사를 한데 묶어 굳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 것은 또 하나의 이름 붙이기다.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름을 붙여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냈다. 개별적인 대학교수와 의사, 약사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 이들의 존재를 흐려지게 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이들의 얼굴을 ‘사회 지도층’이 가려 주고 말았다. 특혜를 주었다. 이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했을까.

또 다른 이들도 사회 지도층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자식들은 ‘사회 지도층’의 수식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유명 병원장과 대학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 지도층 아들들이 포함됐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쫓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걸 보면 곧 특권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 고위층’이란 말도 쓰인다. 기준도 애매하고 차별적이다. 필요한 부분에선 ‘여론 주도층’이란 말을 쓸 수도 있겠다.

‘386’은 상투적인 말이 됐다. 그러면서 차별적이기도 하다. 항상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는 이 말은 정체성도 의심스럽다. 한 신문에 쓰인 예를 보자. “차두리의 바로 위 세대인 386 세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발 세대의...” 차두리 위 세대를 ‘386’이라고 부르는 데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386’은 30대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 출생자를 말한다. 60년대 태어난 30대가 다 대학에 다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대졸이라는 학벌로 이 세대를 일반화했다.

“월급쟁이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그는 1993년 대학 졸업 후 지금은 없어진 재벌 기업 계열사인 D생명에서 평범한”,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화가 대신 삼류 광고쟁이가 되거나”, “공단은 봉급쟁이의 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둬들이면서 고소득자를 연금 가입자에서 빼는 등”.

‘-쟁이’는 본래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하지만 비하하는 뜻을 담고 사용되기도 한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어서인지 부담 없이 ‘월급쟁이’ 혹은 ‘봉급쟁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신문 언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했다. '직장인', '월급(봉급) 생활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광고쟁이'는 '광고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코시안'은 애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리켰다. 이제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이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우리 의식을 나타낸다. 신문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표현이다. 사용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오르기도 했다.

4. 어렵다? 소통되기 어렵다

한 모임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미망인이 왜 차별적이지요? 이미 의미가 달라져 쓰이고 있습니다.", "차별적이지 않다면, 좋은 말인가요? 난 내 남편이 먼저 죽는다면 미망인으로 불리기 싫습니다."

'미망인'의 본래 뜻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듯 보인다. 신문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부인을 높인다는 뜻에서 사용한다. 대부분 그런 줄 알고 사용한다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는 신문이 포장한 의미와 사뭇 다르다. '아직(未) 따라 죽지(亡) 못한 사람(人)'이다. 남편을 따라 죽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의미다. 사전의 풀이를 그대로 따르다면 시대에 맞지 않아 당장 폐기해야 할 말이다. '미망인'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이다. '춘추좌씨전' 등에 사용된 예가 있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1인칭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신문에서 쓰는 의미가 사전과 많이 다르다고 하나 사전의 의미가 완전히 탈색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여성에게만 붙어 차별적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들에게 어려운 말이라는 점이다. '미망인' 대신 누구의 '부인' 정도로 불러도 족하다.

독백이 아닌 말은 상대가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소통을 위해 말을 한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항상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포기한 것이다. 독자 없는 신문은 상상할 수 없다. 배려하지 않으면

소통되기 어렵다. 어려운 말도,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소통의 장애물이다.

‘향년’은 부음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뜻을 쉽게 알 수 없다. 그저 형식적으로 붙이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뜻을 짐작할 수 없다. ‘향년(享年)’은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곧 죽을 때의 나이를 이른다. ‘……별세했다. 85세.’ 이런 식으로 적어도 통한다. 굳이 ‘향년’을 넣지 않아도 잘 소통된다.

어려운 말은 그 자체로 권위적이다. 이것으로 새로운 권위를 만들 일은 아니다. 언어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신문에는 신문 용어로 적합한 표현이 있다. 특정한 집단에서 권위적으로 쓰이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도 안 될 것이고, 특정한 공간에서 차별적으로 쓰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도 가치를 상실한다. 취재 대상의 언어를 비판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언어는 신문에 쉽게 수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계층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신문 언어는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고루 반영돼 보편성을 갖춰야 하는 말이다. 신문은 나이도, 성도, 계급도 없다.